

남북정상회담의 올바른 추진 방향

정상회담은 국가간의 난제를 푸는 전가보도(傳家寶刀)는 아니지만 유용한 정책 수단임에 틀림없다. 특히 양국 관계가 불신이 상당기간 심화된 수준이거나 체제가 상이하여 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라면 실무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은 정상회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상회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중요한 계기가 된 사례는 적지 않다. 1972년 닉슨과 모택동간의 정상회담은 냉전체제의 변환을 예기하는 세기사적인 사건이었다.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중간 최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비밀리 추진된 1971년 헨리 키신저·저우언라이 접촉은 철저한 보안속에서 진행되었다. 준비과정은 보안이 생명이다. 국가간의 회담은 사인간의 만남과 달라서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된다. 정상회담 자체는 일종의 마지막 세레모니다. 정상회담은 모든 내용은 참모들이 주요의제 등 하드웨어를 완성해놓고 마지막으로 문안 등의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의 수단이다.

최근 북한의 일방적 주장으로 공개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협상후 평양으로 돌아간 국방위 실무자들이 숙청당했다는 우리측 언론보도에 대해 협상테이블에서 일어났던 ‘돈 봉투 전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추가로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내놓았다.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막무가내식 폭거다. 정상회담의 사전 접촉이 성사여부에 상관없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외교의 불문율이다. 전쟁중에도 당사자간에 비선이 작동하여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문가지다. 북한이 기본원칙을 깨면서 접촉사실을

남 성 옥

- 북방학회 회장
- 통일정책태스크포스(TF) 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공개한 것은 우리의 세 가지 취약점을 공략하는 삼중전략(三重戰略)으로 판단된다. 첫째, 실무자들이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자세를 취한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보수층의 불만을 유발하도록 한다. 둘째,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무리하게 부과한 것처럼 주장하여 진보층으로부터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야기 시킨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전문가그룹으로부터는 북한의 일방적 폭로로 인해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일처리에 대한 비판을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정상회담 구걸’, ‘돈봉투 제시’ 등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한국이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성과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흠집내기 목적도 엿보인다. 또한 ‘MB가 최소한 대북정책에서만이라도 원칙을 지키며 잘 하고 있다’는 국내 지지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부수적 효과도 노렸음직하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사과 문제를 정면 돌파하여 해결하든지 아니면 1년반 정도 이후에 출범하는 새정부와 담판하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다.

한편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려는 우리정부의 의도는 순수하였지만 접촉내용이 공개되는 등 몇 가지 기술적·도덕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접촉 내용이 공개된 것은 북한의 후안무치에 의한 폭거라 할지라도 사후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처리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1972년 남북간에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다양한 차원의 접촉이 물밑

에서 이뤄졌으나 사전에 전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2년 5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극비 방북 이래 여러 차례 벌여 온 대북 특사·밀사외교에서 얻은 교훈은 당시 정권의 최고실체가 상대 카운터파트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담판을 벌이는 ‘창구단일화’와 ‘최고위층 간의 접촉’이라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남북 양측 모두 내정(內政)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대한 사안을 논하는 자리에 실무자급이 만나 담판을 시도했다는 자체는 안전장치 구축에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과거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냉전당시 소련을 상대할 때 “믿어라(believe) 그러나 끊임없이 검증하라(verify)” 주장하여 대화는 하되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철저히 주력하였다.

둘째, 정책추진 과정이 정교하지 못하였다.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대한다는 중차대한 메시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북측과 사전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일처리에 수순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대북정책은 이질적인 체제를 상대로 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MB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국민의 합의가 없는 투명하지 않은 어떤 회담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데 대해 논리와 명분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악(惡)을 상대할 때는 순수한 선의도 필요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 돌발성과 변칙성 등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번 접촉에 나선 실무자들이 북한에 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면서 북한의 실체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는 과거 접촉경험과 현장방문의 노하우 등도 매우 중요한 정보자산인 만큼 유경험자들이 나서야 한다.

한반도 통일의 방향은 올바른 통일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올바른 통일은 올바른 정상회담에서 출발해야 한다. 올바른 정상회담도 우리의 가치와 이상을 이탈하지 않는 상식과 논리에서 추진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밀접촉 공개 파동에서 배우는 절박한 교훈이다.